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 노동권 확보!!!

여성신규실업, 그 대안을 모색하자.

▣ 지역 여성운동의 진지한 출발을 준비하며 '수원대 여성 행동위'가 드립니다.



0.

실업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무능력 또는 국가 경제의 호황이나 불황의 원인으로 치부되거나 이를 조절하기 위한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권력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일개 국가를 넘어 전세계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 속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의 사회구조조정은 이러한 모순을 보다 가중시키고 있다. 남한의 경우 지나친 성장위주의 거품경제를 통해 실업 위기를 피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재편이 가속화되고 산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대량의 불안정한 노동계층이 양산되고 있으며, 결국 정부 주도의 특정 투자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사회전반적으로 노동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도시내부의 슬럼화가 진전되면서 사회 최하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고졸-대졸 실업자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이미 포화 상태에 놓인 사무직 고급 인력의 경우 계속되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물론 여성 노동의 문제-실업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넘어서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 이후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던 실업의 문제는,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면서 여성을 억압했던 가부장제와 가족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여성 노동권의 근본적인 주장을 묵살하면서 여성실업의 문제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주변화 속에 존재하는 여성노동은 노동시장의 진출기회가 축소되면서 미숙련 노동자일 수밖에 없으며 고용이나 해고에서 유연한 노동력으로 자유로울 수 없게된다. 하기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인 여성은 비공식 부문에 노동을 하거나 공식 부문에서 노동을 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을 하며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으로 여성은 남성과 국가의 종속하에 재생산 노동과 생산노동의 이중적 착취와 이중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연한 노동력을 선호하는 현재의 구조조정은 공식 부문의 노동과 비정규직, 임시적인 여타의 비공식

노동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강화시키는데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고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임시적인 노동에 할당함으로써 노동력을 재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편과정은 유연한 노동력으로 사고하는 여성들에게서 출발했을 뿐이지 다른 노동력으로 확장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현재 저학력 남성, 외국인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재편과정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산업 재편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특수한 경험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쟁점들이 여성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국가의 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형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위계적인 구조의 존속은 여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기층 노동자의 배제를 함의한다. 현재 노조에서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을 사고하는 부분 역시 그 위계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기층노동자들을 포괄하고자하는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참여와 전통적인 노조의 재편이라는 쟁점을 제기하는 것은 그 안에 국가와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복지정책이 미약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유럽사회의 실업문제와는 다르게 실업은 곧바로 생존권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혼란은 자생적인 대중들의 분노와 투쟁을 동반하게되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대한 실업률과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은폐시키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이는 노동시장내에서의 '여성의 일할 권리'가 단 한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의 형태로, 전업주부의 형태로, 여성들을 위치지음으로써 비 경제활동인구의 수를 늘리면서 실제로 전체 실업의 수를 감소 시켰다. 이것이 현재의 여성문제의 은폐와 방기, 여성실업대책의 부재를 낳은 배경인 것이다. 단지 그대가 여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권리,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마저 박탈당해야만 하는가?

경제위기의 상황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다시 살아나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대다수 민중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여기에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생계보조자'라는 전제속에 성별분업이데올로기와 가족임금제,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는 무분별하게 여성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16.8%를 차지하고 일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실제로 남편의 실직과 임금삭감등으로 오히려 생존을 위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강제퇴출당하는 경우이외에 노동시장의 진입기회마저 박탈당해왔는데,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과 민간기업의 입사시험때 군 가산점 부여, 채용시 분야를 남성에게만 한정하거나 여성에게만 제한된 직종이나 고용인원을 요구한다.

이것은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아예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누구도 남성들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왜 일을 하느냐고? 이 질문을 유독 여성에게만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남성=생산노동(직장) 여성=재생산 노동(가정)이라는 성별분업이데올로기는 여성이 무임으로 수행하는 재생산 노동을 무시하고 자본의 이해인 생산성을 잣대로 하여 여성노동력을 저임금, 저지위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측정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생산성이 낮음으로 저임금을 받는다는 논리가 유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와 양육 책임의 비

경제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여성들은 저지위의 최하층 노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노동력 분절에 의한 여성차별화는 남성 생계부양자라는 논리에 의해 여성의 노동은 남성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무차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강화시켰고, 여성의 가정 밖 노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노동권을 남편이나 아버지에 종속시킴으로서 성별분업의 논리를 이용한 유연화의 전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언제라도 가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임시노동자로 여성을 간주하는 신자유주의는 불평등한 남녀관계와 성별분업의 논리를 통해 자본축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처음부터 취업을 생각하고 준비했다. 내기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 활용하고 싶고,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 일시적인 사회경험이 아니라 평생 지속할 사회노동으로 일하고 싶다. 나름대로 각오와 준비과정을 거쳤고, 일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순위로 쫓렸고, 그나마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도 여성을 고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두들 내가 결혼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뿐이다. 언제나 보이는 것은 가없는 남성가장이고 그들을 위한 대책뿐이다. 여성들, 나의 어머니, 언니,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 발족식¹⁾ 성명서中-

지난해 취업준비를 하던 한 여대생이 어려운 집안형편과 취업 낙방을 비판하며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극단적인 예라 할지라도 사회 첫출발을 취업실패라는 좌절로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절망감과 불안감은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프랑스의 실업자 시위를 폭발시킨 것은 청년예비 실업자인 학생들이었다. 죽을 때까지 사회에 빌붙어 사는 무의미한 존재, 그 무력감에 대한 분노가 그들을 폭발시킨 것이다.

결국 신규실업은 노동의 권리자체를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권, 사회, 경제, 정치적 권리의 소외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규 실업에 대한 심각성은 여성에게는 더욱 다양한 형태와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여성 실업에 대한 시각은 항상 남성실업에 대비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 대책 또한 지극히 한계적으로 사고되어지곤 했었다. 대졸 남성이야 어찌되었던 취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 무능력한 ‘남성’으로 인식되어지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는 한편, 여성의 경우 실제로 취업이라는 것이 원래 직업의식마저 부족하고 어딘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사고되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졸업을 하고 나면 또 하나 억압적인 굴레인, 가족 즉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결혼 상담소의 경우 이전의 3.5배 이상의 여성들이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구직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 여성들에게 남은 선택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 실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결국, 여성의 노동권 자체에 대한 편견과도

1) 현재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함께 구성하고 있는 단위는 연세대 여성자치연대,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동덕여대 여성 행동위, 수원대 여성 행동위, 홍익대 총여, 시립대 총여, 성균관대 총여학생회이며, 99년 운영과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중이다. 98년동안 사회 여성단체들- 민주노총 여성국, 한국노총 여성국, 한국 여성 노동자회, -과 4자TF를 안정적으로 가져갔으며, 정기적인 논의 테이블을 통해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여성실업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었다.

그리고 얼마전 4자TF는 국민회의 여성실업대책 본부와 간담회를 노동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행동과 연대에서 주최한 선거정책 토론회에 여성실업운동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참석하기도 했다.

연결되는 문제이며, 전체 실업문제속에서도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성 신규실업문제의 심각성은 99년 올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가속화되었다기 보다는 이전부터 배제되어왔던 여성 노동권과 은폐되었던 여성 실업이 표면화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여성 실업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팽배해 있는 가족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여성성에 대한 신보수화의 흐름속으로 깊숙하게 굽아 가는 과정일 뿐이다.

98년 여성운동단위에서는 여성실업에 대한 끊임없는 심각성을 폭로하고, 실업자 조직화사업과, 단기적 이지만 실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었다. 학단위에서는 총여학생회와 여성행동위, 여성주의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신규실업에 대한 심각성과 여성 실업은폐의 실상과, 남성중심적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학생사회내에서 폭로하면서, 여대생 구직등록운동을 하기도 했었다. 여성실업과 여성 노동권확보를 위한 연대체가 5월중순에 결성되기도 하는 성과를 기반으로해서 99년 신규여성 실업에 대한 실물화된 활동들을 펼쳐려는 계획중이다. 또한 여성 민우회에서는 대졸, 고졸 신규여성실업자들을 중심으로 '일을 찾는 여성들' 이라는 모임을 발족할 예정이다. 현재 2회의 준비모임이 진행되었고, 일상활동으로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욕구도 및 실업실태조사, 성차별적 모집채용 기업에 움부즈맨 활동, 구직등록운동 및 여성의 취업확대 및 고용창출 프로그램 개발, 정부 여성 실업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인턴사원제에 대한 모니터링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규여성 실업대책에 대한 제안과 여성실업자 문화정착등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여성 노동권 확보와 신규여성 실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들을 학생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3-1. 여성신규실업의 현황과 정부 실업대책 비판

통계청에서 제출한 98년 실업률 통계를 보면 20-24세 대졸 이상 실업자수가 9만 3천명(15세부터 29세까지)인데 성별로 보면 남녀 각각, 3만 1천명(27.5%), 6만 2천명(15.2%)이다. 25-29세 대졸 이상 실업자수는 8만 7천명(7.8%)인데 성별로 보면 각각 6만 5천명(9.4%), 2만 3천명(5.2%)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96년 대비 97년 통계, 97년 대비 98년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극단적인 축소현황을 알 수 없다. 또한 실질적 실업통계가 불가능한 이유는 어느 대학도 자기 대학의 취업률을 발표하지 않고 대학종합평가제를 준비하고 있는 당국행정과 각 대학(단과대학)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제대나 대학원입학, 결혼 등이 취업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신규실업은 그 정확한 통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따라서 대책 마련 역시 겉돌 수밖에 없다.

여성신규실업자의 경우, 전반적인 신규실업에 있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많은 수의 여성신규실업자가 실업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가족내 무급종사자의 비율, 임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또한 미취업 이후의 여학생의 진로는 대부분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여성의 실업이 현 실업 통계치에서 은폐되는 것이다. 지방대 출신과 고졸여성의 경우, 학력차별과 대학간 서열화에 의해 노동할 기회를 빼앗기며, 더군다나 여학생은 실업률로 포함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대책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사회적 통념에 의해 '일할 권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학력실업자에 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일한 실업대책은 '인턴사원제'인데, 정부에서는 35만 대졸미취업자에 대해 20만명을 수용, 각 공공기관에 6개월(최근 12개월로 연장되었다) 계약직으

로 인턴사원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턴사원제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실업률 수치 자체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가시화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정부에게는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턴사원제와 같은 임시직은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반도 안 되는 것으로 노동력 착취의 효율적인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턴사원제 역시 평등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자본주의를 재생산하고 강화시키는 이 모든 테두리 속에서 여성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모든 구조와 장치는 여성을 배제시킨 채 작동하고 있다.

여성신규실업의 문제는 단지 고학력 미취업자에 한해 그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권리 선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신규(예비)실업자들의 노동수요를 받아안아 각 행정당국에서 장기적인 고용창출과 노동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불평등한 채용기준의 철폐를 주장한다. 여성의 노동력을 인정하고 남성과 동등한 채용기준과 실업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왜곡된 여성과 남성의 성적 불평등을 양산하는 현재 기업의 불법적인 채용을 엄단해야 한다.

여성신규(예비)실업자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성적 '차이'가 '차별화'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통념에 맞선,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정부에 대해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노동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당당한 선언인 것이다.

3-2.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와 성적차이의 윤리 실현

여성신규실업문제를 두가지 축의 문제설정으로 정리해 본다면, 사회적 공공성의 부재와 성적 차이의 윤리에 기반한 여성노동권 확보의 문제이다.

공공성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보장되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대학의 공공성이라 했을 때는 대학의 위상이나 역할이 국가나 제도적 장치로 인한 반교육적 경향(현재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 제도적 구현을 넘어서는 문제설정이며 대학 본연의 위상을 위한 대학과 사회의 자치와 네트워크 등으로 발현되는 이데올로기적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자본의 유연화 전략 및 초국적화에 따른 자본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자본의 운동에 따라 이제 국가는 이전의 국가의 역할, 즉 자본주의적 인간과 사회구조의 생산·재생산 등에 걸친 장치적 역할은 물론 사회 복지마저도 자본에 의해 무기력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민중의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권리 등은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져있다. 이러한 국가 역할의 축소에 따라 사회적 약자(여성, 빈민,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은 날이 갈수록 파편화되어 인간의 기본적인 삶 자체의 해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 혹은 공공성이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 또한 전 민중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이고 구체적으로는 대학과 사회의 사회적 연대를 말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의 삶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불균등하고 배제적인 구조에 틈새를 내자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보장 및 대학 구성원과 지역 사회의 각 압력 기구 등이 확장된 인권(고용·실업·복지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과 투쟁들이 현재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학부제 및 교직원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당국 역시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대학발전, 경쟁력(?) 있는 대학은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 현재 대학은 ■■■■■ 중소기업간의 미약한 연계를 가지고 있고 지난 '98 취업·채용박람회도 그런 연장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시적인 사안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여성신규실업 문제는 불평등한 성의식에서 비롯된 '노동'의 문제이다. 일상 생활, 노동, 문화 전반에 걸친 억압적이고 서열화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분명 여성만의, 예비신규실업자로서의 여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대학이 그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성평등적인 대학 만들기'운동이 시급히 요구된다. '성평등적인 대학 만들기'는 '자치'와 함께 지금 우리의 대학에 가장 요원한 부분이다. 이는 어느 한 주체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 구성원 모두,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인식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인식 아래에서만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선언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업의 문제, 더욱이 여성신규실업의 문제는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 여성의 무능력의 문제로 파악되는 이유는 이런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이란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성적 차이에 따른 윤리적인 관계의 구축은 그다지 고무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불평등과 억압을 재생산하는 현재의 사회적 구조, 대학, 사회적 통념들은 분명 우리 스스로에 의해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며 차이가 차별로 드러나는 모든 구조와 관계 역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해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떤 실업대책에도 보호 받고 있지 못한 여성신규실업자들에게도 '여성신규실업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한 여성신규실업자들의 생활지원조례, 동등한 사회적 임금, 최저 생계비, 구체적인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예비여성신규실업자 역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여성권에 대한 제기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기반한 평등'이 실현되는 성평등적인 대학 만들기에 강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의 진출 기회마저 박탈하는 불법적인 채용차별을 엄단하라!
- 정부의 실업대책추진위에 신규여성실업자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 신규여성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방안을 수립하라!
- 신규여성실업자를 위한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라!
-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여성유망직종을 개발하라!
- 학교당국은 신규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라!
- 여성이 평생평등 노동할수 장기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하라!
- 우리가 원하는 취업박람회는 확장법이 아니다! 구체적인 여성의 노동수요를 전면 보장하라!